

민주, 대선 순회 경선 돌입

충청부터 수도권까지 전국 순회... 27일 최종 개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슈퍼위크’는 비공개로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경선 절차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공개하며 후보자 등록을 15일 하루 동안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16일부터 권역별 순회 경선이 시작된다.

이번 경선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과 일반 국민의 의사가 각각 절반씩 반영되는 구조다. 경선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이어진다.

충청권은 16일부터 19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19일 청주체육관에서 개표와 함께 순회 경선이 열린다.

영남권은 17일부터 20일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표 및 경선이 예정돼 있다.

호남권은 23일부터 26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경선이 열린다.

마지막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투표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27일 고양 컨텍스 1전시장에서 최종 개표가 실시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투표, 이른바 ‘슈퍼위크’는 4월 21일부터 27일 사이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일은 보안상 비공

개다. 투표 결과는 다른 지역과 함께 27일 공개된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가 각각 절반씩 반영되는 이번 경선은 단순한 당내 경쟁을 넘어, 일반 국민의 선택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린 경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가 여전히 당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비명(非明)계 인사들의 경선 참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며 다자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들의 도전이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김두관 전 의원은 최근 경선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포기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국힘, 대선 경선 일정 확정

내달 3일 전당대회 통회 최종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 일정을 14일 확정했다. 최종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은 15일이다.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서류 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16일 경선 진출 자격 여부를 발표한다.

이어 18일에는 후보들의 정책 방향

과 국정 비전을 소개하는 비전대회가 열리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조별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후 21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2일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돼 상위 4명의 후보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이뤄지며,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9일에는 결선에

진출할 상위 2명의 후보가 가려진다.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경선은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치러지며, 당원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된다. 이 결과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단, 2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할 경우, 결선 투표 없이 해당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현재까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포함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등 약 20여 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경선 등록 시 3억 원의 기탁금이 요구되는 점 때문에 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해수유통 중장기 방안 졸속 서면 결의 멈춰라”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 수질 보고서 공개토론 촉구... “상시 해수유통이 정당”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상임 공동대표 오창환 등 9명) 회원 10여명은 1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해수 유통 중장기 방안에 대한 졸속 서면 결의 중단과 수질 보고서 공개토론을 촉구했다.

운동본부 유기만 사무국장은 “중대한 결정은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뤄져야 한다”며 “도지사나 새만금위원회 위원 누구도 만나지 못한 채 1년 8개월 동안 2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모았지만 무시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23일 새만금위원회가 서면 회의 방식으로 해수 유통 중장기 방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운동본부는 이 절차가 “감감이 방식”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썩은 새만금호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상시 해수유통”이라며 “전문가 중심의 새만금위원회가 도민의 상식적 요구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오 정책위원장은 “환경부, 도청, 개발청 등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관리수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배수갑문을 추가 설치하는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이 같은 내용이 최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 회원들 10명이 1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종 보고서에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새만금호 저층은 빈산소 상태로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상시 해수 유통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오창환 상임대표는 “해수유통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환경부와도 공유됐으나, 이 같은 도민 의견이 새만금위원회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수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한 전북의 현실을 고려해 조속한 상시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홍수기가 아닌 평상시에

는 관리수위를 0m로 유지하고, 홍수기에는 -1.5m 수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시설 보완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려면 지금 당장 해수유통을 확대를 시작해야 하며, 수변도시의 안전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수변도시의 배수 시스템과 지진 취약성(퇴적물 위의 불안정한 기반) 등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규모를 축소해 안정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해야” | 전북자치도의회-남원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및 남원시의회는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린·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강인식·김길수·김영태·김정현·이기열·이숙자·한명숙(가나다순) 남원시의원이 참석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정린, 임종명 전북도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적 필수요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책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즉

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본분이며, 전북 18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를 통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확보, 감염병·재난 대응

구축 및 의료의 공공성을 이루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정 갈등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는 의료계의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필수 의료, 공공의료, 의료취약지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희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복지위 국회의원, 전북 국회의원과 함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페이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단백질 분야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체단백질’ 글로벌 동맹

김관영 도지사, 네덜란드 대사와 첫 회동

푸드테크 분야 글로벌 협력 MOU 체결

새만금 등 방문, 농생명 분야 협력 방안 협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대체단백질 분야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배양육, 식물성 단백질, 차세대 단백질 원료 등 ‘푸드테크 대체단백질’ 분야의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페이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를 접견, 푸드테크 대체단백질 분야 산학연 협력 확대와 기술 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페이터 대사가 2023년 8월 부임한 이후 전북을 찾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목을 끌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대체단백질 산업 현황 공동 분석 △양국 대표단 교류 확대 △기업 및 연구기

관 간 파트너십 구축 △EUI R&D 플랫폼 ‘호라이즌 유럽’ 공동 참여 △기타 전략 과제 발굴 등의 구체적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협약에 앞서 페이터 대사는 새만금 신항만 및 농생명융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네덜란드의 푸드 물류 강점과 접목한 푸드허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네덜란드는 세계 농산물 수출 2위, 유럽 최대 무역항 ‘로테르담항’을 보유한 식품산업 강국으로, 지난해 진행된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 식품기업 지원시설을 살펴보고, 식물성 대체식품 인프라 구축 현황을 청취하며 전북-네덜란드 연구기관 간 실질적 기술협력도 논의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네덜란드는 EUI R&D 지원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목표로 대체단백질 분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전주대·원광대와 네덜란드의 와게닝겐대학이 협력해 양국의 산업 현황 및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기술 교류 및 공동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와게닝겐대학 연구진과 국내 배양육 기업이 새만금을 동행해, 단백질 원료 생산단지 조성 과 글로벌 연구소 투자 가능성도 논의한 바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네덜란드는 푸드테크와 바이오 산업의 선도국가로, 작년 EUI 회원국 중 한국 투자 1위를 기록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라며, “전북이 아시아 푸드테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는 “네덜란드는 단백질 전환을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 농식품 산업의 중심지인 전북과 협력해 전 세계 식량·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윤 정부 3년, 대형참사로 7776명 희생”

민주 이원택 의원 “국민 생명은 외면, 정적 공격에만 몰두” 직격

경북·경남지역 발생 산불 피해에 “윤 정부 무능이 낳은 인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명경시와 재난 대응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산업재해, 의료 대란 등 각종 대형사고로 무려 7,776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김건희 여사 사수,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직격했다.

특히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윤 정부의 무능과 무대박이 낳은 대표적인 인재”로 규정하며, “책임자가 할 고위공직자들은 빠져나가고 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불 대응을 위한 헬기

운영 실태도 문제 삼았다. “현재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 29대 중 8대, 미국산 대형헬기 2대가 운항 불가 상태였고, 야간 비행 가능한 헬기는 3대뿐”이라며 “조종사 93명 중 야간 비행이 가능한 인원도 5명에 불과한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점검했느냐”고 따졌다.

또한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불 발생 이후 세 차례의 골든타임을 모두 놓쳤다”며 중대본 전환 등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산불 피해면적 3만 헥타르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정부는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원택 의원은 끝으로 “국정파괴로 국민인심 사회를 내세운 윤 정부가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중간 보고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현재 진행 중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결산검사위원회는 시의원인 김영자 대표위원과 주상현 의원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일 위촉 이후 오는 2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세입·세출 결산 △이월비 및 계속비 △채권·채무 △기금 운영 실적 등 시 전반의 재정 운용을 점검

중이다.

한편, 결산검사위원회는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에 제출하고, 오는 6월 개회 예정인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와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